

온라인에서 나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반응 : 뉴스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지 상 훈*

본고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뉴스 기사 댓글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댓글은 법률이 제정·시행되는 과정에 따라 참여 양상에 차이가 있어, 처벌법의 시행이 논의되던 시기보다 제정에 관한 담론이 활발하던 시점에 더 많이 생성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의견을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한 결과, 찬성 댓글에서는 주로 근로자 권익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사업주 처벌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반면 반대 댓글에서는 처벌의 비합리성, 일자리 소멸 및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 머리말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법안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에 제정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어 적용된 지 5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다. 특히 뉴스 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보도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해당 법의 수혜자인 근로자, 즉 시민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뉴스 기사 댓글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뉴스 기사의 댓글을 수집하여 해당 법에 대한 찬반 댓글 비중을 가늠하고, 댓글 내용을 분석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anghoonjee@kli.re.kr).

II.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1. 연구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주체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안전관리 문화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¹⁾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그 처벌의 대상이지만 근로자들 역시 처벌법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일간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들이 건강검진 기준을 강화하여 채용의 벽이 높아졌다고 보도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²⁾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예방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그 의도와는 다른 결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처벌법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또한 긍정적이지만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에 본고는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용성과 인식을 뉴스 기사 댓글을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이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이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2) 한국경제(2021. 12. 6.), “건강검진 재검만 나와도 채용 안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0692101>); 고용노동부(2021. 12. 7.), (반박) 한국경제, “건강검진 재검만 나와도 채용 안한다” 등 기사 관련,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009).

2. 뉴스 기사 댓글의 특성

정보통신의 발달은 토론의 장을 비대면 공간인 온라인으로 이동시켰다. 온라인을 통한 뉴스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종이 신문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접한다.³⁾ 이러한 변화는 댓글로 토론하는 문화를 생산하였고, 시민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온라인에서 표출하면서 엄청난 양의 비정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기록되고 있다. 이에 댓글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석자료로서의 댓글은 일반적인 조사자료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댓글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댓글로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살펴볼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댓글의 대표성과 편향성이다. 우선 대표성의 문제는 댓글 작성자 집단과 모집단인 전체 시민 집단이 성별이나 연령 같은 인구사회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생하며(엄기홍, 2020), 편향성의 문제는 댓글 작성 집단이 일반 시민 집단에 비해 사회·정치적 활동 참여가 더 활발하다는 성향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김슬이·이상우·정용국, 2020; 고문정, 2018; 엄기홍, 2020). 인구사회적 측면의 문제를 보면,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대부분은 댓글을 작성하지 않고 작성자 중에서도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댓글을 더 많이 작성(오주현, 2018; 엄기홍, 2020)하기 때문에 댓글 작성 집단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일반 시민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른 한편으로는 댓글 작성자와 일반 시민들의 평균 성향 차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의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한 편향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SNS 상에서도 정치 관련 활동을 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엄기홍, 2020). 이는 댓글 담론도 마찬가지로 사회·정치적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더 많이 작성(김슬이·이상우·정용국, 2020; 고문정, 2018)하기 때문에 뉴스 사안에 대한 강한 의견 혹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댓글을 작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댓글의 대표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댓글을 시민 여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온라인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댓글은 대표성과 편향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사자료와 차별되는 장점이 존재한다. 우선 뉴스 댓글은 이슈에 대한 작성자들의 인식을 저비용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비용적 측면이나 시의성 측면에서 기존 여론조사보다 더 유리하다.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 여론조사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대한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댓글

3) 2021년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신문기사를 읽는 응답자는 전체의 77.6%인 반면 종이 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8.9%로 매우 소수이다. 또한 응답자의 79.2%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고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하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작성에 제약이나 편집이 없기 때문에 내용의 왜곡이 없어(정일권·김영석, 2006) 작성자의 솔직한 의견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댓글 담론에 직접 참여하는 뉴스 이용자는 전체에서 소수이지만 그 파급력은 작지 않다. 대다수의 이용자는 댓글을 읽고, 이를 대중의 여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슈에 대한 태도 형성에 있어 뉴스 기사 내용보다 댓글에 더 큰 영향을 받기(김선호·오세욱, 2018; 이은주·장윤재, 2009; 양혜승, 2008) 때문에 댓글의 파급력은 생성된 댓글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넓게 퍼질 수 있다.

종합하면, 댓글은 대표성과 편향성의 문제로 인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로서 작동하고 있고, 시의성 및 익명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 여론조사와는 차별되는 장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표출되는 의견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뉴스 기사 댓글을 활용한 선행연구

자연어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댓글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정책수용성을 비정형 데이터인 댓글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여럿 등장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소수의 댓글을 직접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댓글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방대한 양의 댓글을 분석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지현·김광기·제갈정·유승현(2018)은 2016년 서울시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대한 여론을 댓글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은 하나의 기사를 선정하고 네이버와 다음에서 생성된 댓글을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형민·유현재·천용석(2020)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온라인 담론의 구조적 체계와 변화를 법률 시행 이전 3년과 시행 이후 3년간의 뉴스 기사 댓글을 수집하여 키워드 빈도, 의미 연결망, 중심성 및 군집 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김동훈·이재희·장현진(2021)은 육아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연구 동향을 각각 맘카페 게시글과 학술논문 초록의 토픽 모델링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엄기홍·김대식(2021)은 정치 관련 댓글 자료를 최신 기법인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BER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댓글을 긍정, 부정, 중립 감성으로 분류하여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의 댓글 여론 동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엄기홍·김대식(2021)과 유사한 기법을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댓글을 구분하였다.

III. 분석 방법 및 결과

1.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온라인상에 나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뉴스 기사 댓글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네이버’와 ‘다음’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사이에 발간된 ‘중대재해처벌법’을 키워드로 하는 뉴스 기사와 각 기사에 존재하는 댓글을 수집하였다.⁴⁾ 댓글의 내용은 기사의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성이 높은 뉴스 기사를 추리기 위해 수집된 기사의 제목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혹은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은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91,954건의 댓글이 수집되었으며 포털 사이트별로 수집된 댓글 건수는 ‘네이버’에서 63,924건, ‘다음’에서 28,030건으로 차이가 크다. 또한 각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에 차이가 있어(김경희·송경재, 2018)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찬반 댓글의 분포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 편향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네이버’ 댓글에서 28,030건의 댓글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다음’ 댓글과 결합하여 총 56,060건의 댓글을 주요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의 과정에서 추려진 댓글은 분석 전에 전처리 작업을 거쳤다. 우선 한자 및 인터넷 주소를 제거하고 ‘ㅋㅋㅋㅋ’와 같이 중복되는 문자를 ‘ㅋㅋ’ 등 두 글자로 축약하였고 댓글은 뉴스 기사와 달리 맞춤법의 오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띄어쓰기 및 오타자를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하였다.⁵⁾

전처리를 마친 댓글 자료의 찬반 분류는 자연어처리 모형 중 댓글 분석에 적합한 Korean comments ELECTRA(KcELECTRA)⁶⁾를 이용하였다. 이 모형을 찬반 분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댓글의 일부를 학습시킬 필요가 있어 댓글 자료에서 12,391건의 댓글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저자가 ‘찬성’, ‘반대’, ‘관련 없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학습 자료를 구성하였다.⁷⁾ 학습

4) 뉴스 기사 및 댓글의 수집은 Python 패키지인 selenium을 활용.

5) 띄어쓰기와 오타자는 각각 Python 패키지인 pyKospacing과 py-hanspell을 사용하여 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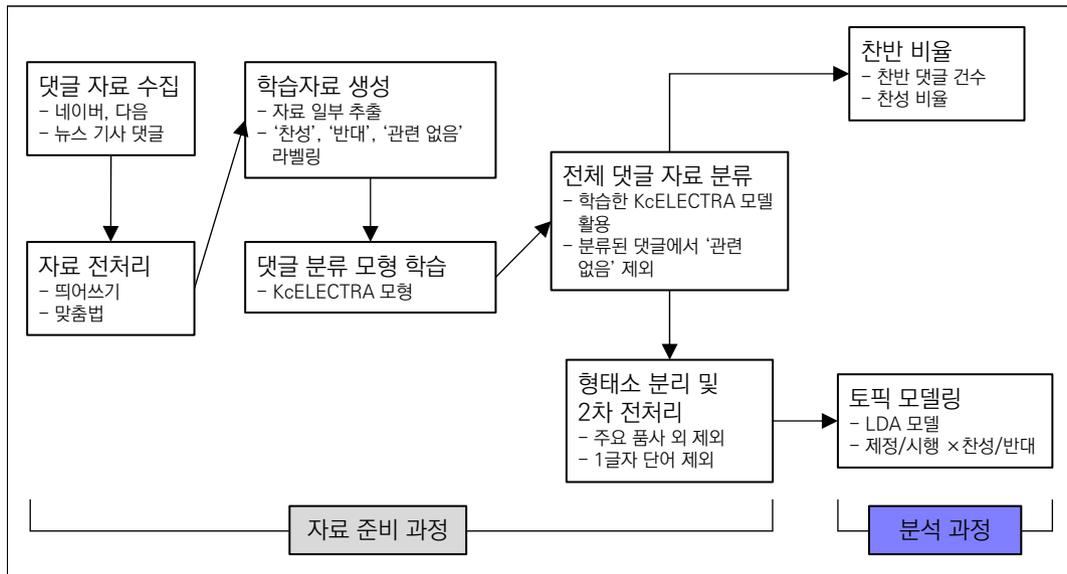
6) <https://github.com/Beomi/KcELECTRA> 참조.

7) 학습용 댓글의 절반 정도는 최종 분석에 활용된 댓글 데이터에서 추출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뉴스 기사 분류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기사의 댓글에서 추출하였다. 찬성 댓글은 ‘중대재해법 파이팅! 전문경영인 ceo 말고 최대 주주도 같이 구속해라!!’와 ‘이번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사람 목숨보다 경제 이득이 앞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반대 댓글은 ‘다치면 무조건 회사 탓인 건가요? 입사하고 4시간 일하고 손목이 아프다면 산재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과 원청 업무를 마비 시켜버리는 사람도 있어요’나 ‘사고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지나고 나면 왜 그걸 생각 못했지 한다. 이런걸 형사처분한다는 것이 합당한가?’와 같이 반대하

자료의 구성을 보면 ‘찬성’은 전체의 16.4%, ‘반대’는 19.9%, ‘관련 없음’은 63.7%를 차지하였다. 학습을 실시하여 완성된 KcELECTRA 모델로 댓글을 분류한 결과, 55.8%는 ‘관련 없음’이었고 20.4%는 ‘찬성’, 23.7%는 ‘반대’ 댓글이었다.⁸⁾ 찬반 비율 분석과 토픽 모델링에서는 ‘관련 없음’ 댓글을 제외한 유효 댓글만을 활용하였다.⁹⁾

본고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법인 토픽 모델링을 통해 증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략적인 찬반 논리를 추출하였다. 내용 분석은 유효 댓글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방법 중에서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방식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LDA는 문서 집단에서 연관되는 단어의 집합을 통해서 내재된 주제와 각 주제를 구성하는 주요 단어를 도출한다. 토픽 모델링에 활용된 댓글은 형태소분석을 통해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의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 일반 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는 제외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시기 및 찬반 여부별로 구분하여 총 4번 시행하였으며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각각 5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1] 분석 흐름도



- 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다. 반면 관련 없음 댓글은 ‘정의 없는 정의당’이나 ‘주동이란 살아서...’와 같이 그 내용이 증대재해처벌법과 관련이 없으며 주로 정부나 정당 혹은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댓글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 8) 최종 모델의 학습에 앞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분류된 12,391건 댓글 데이터 중 80%를 학습 데이터로, 20%를 검증 데이터로 분리한 후 학습을 시행했다. 검증 데이터의 F1-점수(macro)는 81%이다. 최종 모델은 분류된 12,391건의 데이터를 모두 학습하였다.
- 9) 최종 분류된 댓글의 상양수가 증대재해처벌법과는 관련성이 낮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중 절반 정도는 기사 내용과 무관한 내용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이지현 · 김광기 · 제갈정 · 유승현, 2018), 최종 분류된 데이터가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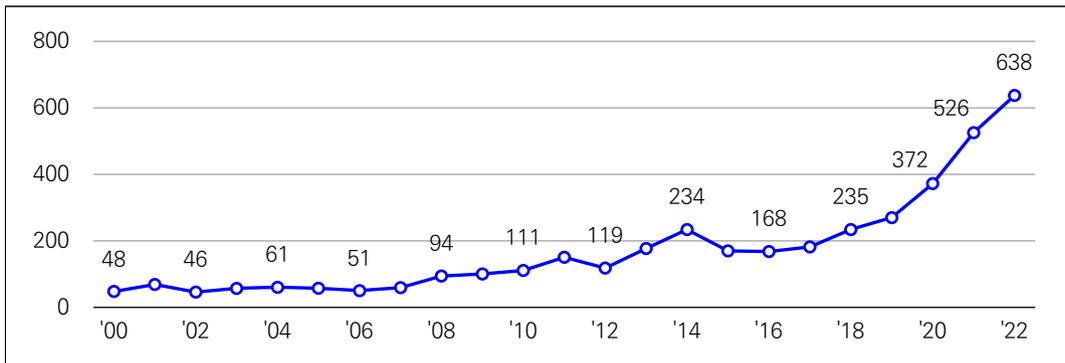
2. 분석 결과

가. 뉴스 건수

댓글 분석에 앞서 산업재해 전반에 대한 언론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뉴스기사 건수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늠해보면, [그림 2]에서 보듯 관련 기사 건수는 2008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사 건수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2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산업재해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상당히 최근의 일이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산업재해 및 안전에 대한 이슈들의 공론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연도별 월평균 산업재해 사망 사고 관련 기사 건수

(단위: 건)



주 : 1) 뉴스 검색에 활용된 키워드는 (산재 OR 산업재해) AND (사망 OR 사고)임.

2) 2022년은 4월까지의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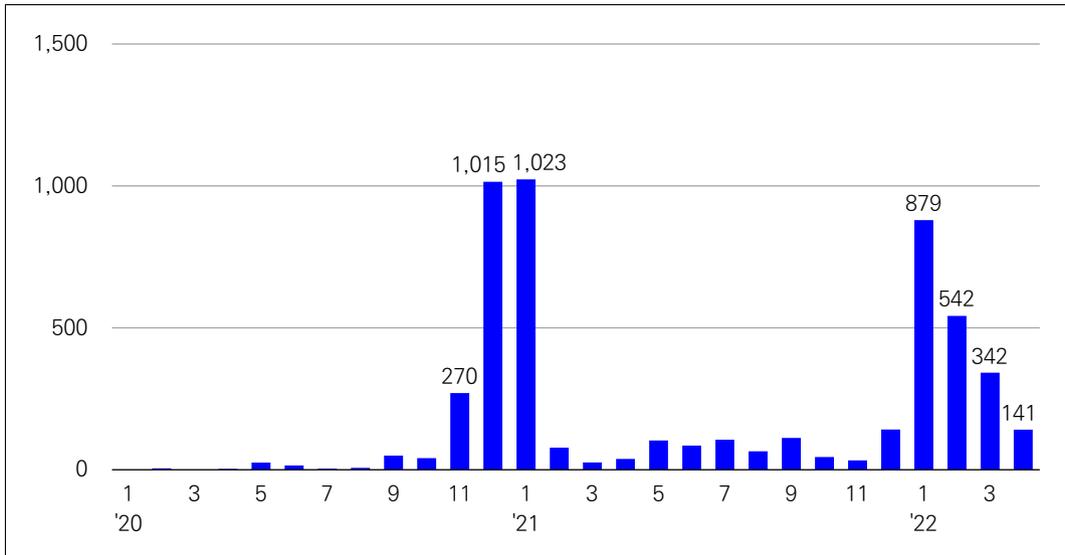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2022. 5. 4.

최근 시행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주로 제정과 시행이 있었던 시기에 집중되었다(그림 3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된 기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에 집중되었고,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2021년 2월~9월까지는 상대적으로 기사 건수가 적었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에 다시 기사 건수는 급증하였고 관련 기사는 4월까지 점차 줄어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의 기사 건수 감소 추이는 다소 완만하게 나타났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제정 직후 빠르게 사그라들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산업재해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1호 처벌 기업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와 관련된 보도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차치하더라도, 산업재해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은 기업에게 안전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보건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안전보건 문화 확립에 긍정적 영향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월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 건수

(단위: 건)



자료 : 저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함.

나. 댓글 분석 결과

뉴스 기사 댓글로 관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은 포털 사이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1>에서 사이트별 찬반 댓글 건수 및 비중을 보면, '네이버'는 반대 댓글 건수가 찬성 댓글 건수보다 배 이상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다음'에서는 찬성 댓글이 반대 댓글의 1.5배로 나타나 대체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어, 포털 사이트에 따라 댓글에서 나타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는 각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인데, '네이버'는 보수적 성향의 이용자가, '다음'은 진보적 성향의 이용자가 더 많은 댓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희·송경재, 2018). 포털 사이트에 따라 찬반 비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은 수용자의 정치적 이념 성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의 분석은 포털 사이트의 편향성이 댓글 찬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 댓글을 균형 배분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표 1〉 포털 사이트별 찬반 댓글 건수 및 비중

(단위: 건, %)

	댓글 건수			찬성 비율
	찬성	반대	전체	
전 체	16,160	25,484	41,644	38.8
네이버	8,840	20,696	29,536	29.9
다음	7,320	4,788	12,108	60.5
균형 배분	11,206	13,805	25,011	44.8

주: 전체 기간(2020. 1~2020. 4) 기준임.
 자료: 저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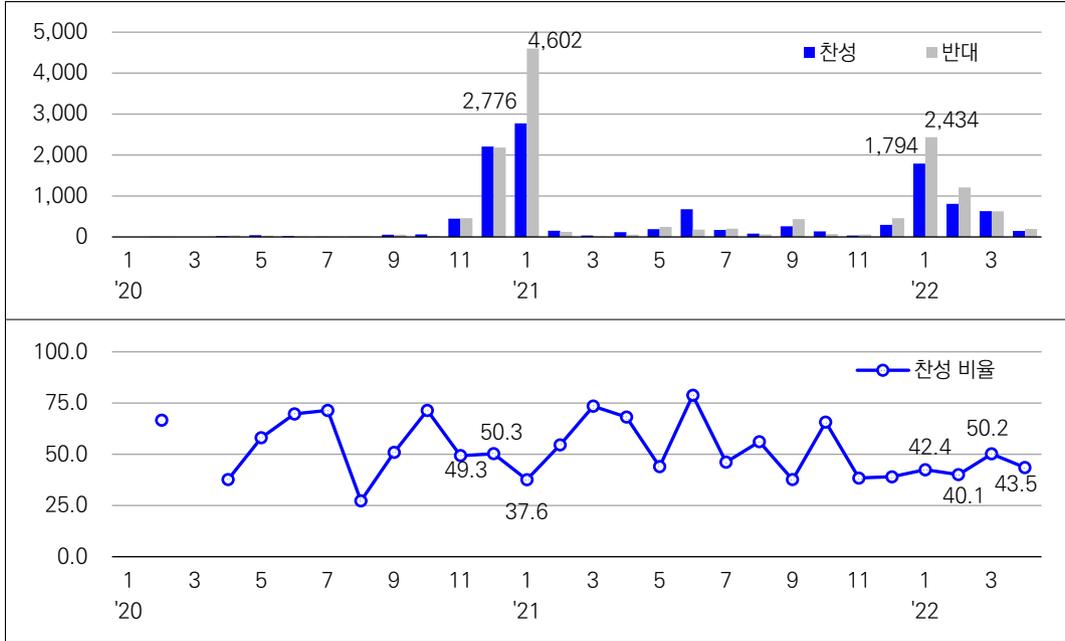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찬반 댓글 건수를 월별로 보면, 법률 제정이 논의된 시점과 법률이 시행된 시점에 댓글이 가장 많이 생성되었다. 법률 제정에 대한 뉴스 기사가 2020년 11월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에 온라인에서의 댓글 담론 참여도 활성화 되었다. 찬성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까지의 찬성 댓글 비중이 51.2%로 찬반 댓글 수가 비슷하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1월에는 반대 댓글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찬성 비율이 2021년 1월 37.6%까지 떨어졌다(그림 4 참조). 이러한 현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던 시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2021년 2월~12월 평균 53.0%였던 찬성 댓글 비중은 2022년 1월 42.4%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2022년 4월까지 댓글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찬성 비율은 반대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찬반 댓글의 월별 동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댓글 담론은 특정 시점에 집중되고 찬반 댓글의 비중이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각 월별 전체 댓글 건수는 월별 기사 건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이슈에 대한 기사가 많을수록 댓글 수도 많다. 즉, 댓글을 매개로 하는 시민 담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슈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도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찬반 댓글을 제정과 시행의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댓글 건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시점(2021. 2~2022. 4)보다 제정된 시점(2020. 1~2021. 1)에 더 많았다(표 2 참조). 제정 시기에 수집된 전체 댓글 수는 13,074건으로 시행 시기에 수집된 댓글보다 9.5% 더 많았으며, 특히 제정(2021년 1월)과 시행(2022년 1월)이 이슈였던 시기만 보면 제정 시기의 댓글이 시행 시기의 1.7배나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댓글 담론은 법률이 형성되는 시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 뉴스 이용자는 뉴스 기사와 더불어 댓글을 통해서도 특정 이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을 유추(이은주·장윤재, 2009)하기 때문에, 댓글 작성자들은 법률의 향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제정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담론에 참여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시행 시기에 법 제정 시기에 이미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 이용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댓글 참여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 중대재해처벌법 찬반 여부별, 월별 댓글 건수(상) 및 찬성 비율(하)

(단위: 건, %)



자료: 저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함.

<표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시기의 찬반 댓글 건수 및 찬성 비율

(단위: 건, %)

분석 시기	댓글 건수			찬성 비율
	찬성	반대	전체	
제정 시기 (2020. 1~2021. 1)	5,655(50.5)	7,419(53.7)	13,074(52.3)	43.3
시행 시기 (2021. 2~2022. 4)	5,551(49.5)	6,386(46.3)	11,937(47.7)	46.5
전체 기간 (2020. 1~2022. 4)	11,206(100.0)	13,805(100.0)	25,011(100.0)	44.8

자료: 저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찬성 비율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법 제정 시기에는 찬성 비율이 43.3%로 반대 의견의 댓글이 더 많았고, 시행 시기에는 찬성 비율이 46.5%로 반대 의견 비중이 조금 완화되었다. 찬반에 따른 댓글 건수를 시기별로 보면, 찬성 댓글 건수는 법률 제정 시기와 비교하여 시행 시기에 약 2% 감소한 반면 반대 댓글 건수는 시행 시기에 약 14% 감소하여 반대 댓글의 감소세가 더 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했던 작성자들은 법 제정 시기에 상대적

으로 더 활발히 목소리를 내었으며, 찬성하는 작성자들은 제정과 시행 시기에 걸쳐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댓글 찬반 분석 결과를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댓글 결과가 더 부정적이다(표 3 참조). 기존 여론조사는 시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2020년 11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58.2%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 동의하였고, 27.5%가 반대하였다. 또한 2021년 8월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39.3%로 시행 유예나 처벌수위 완화를 지지한 17.8%보다 배 이상 많았으며, 2022년 1월 조사한 결과에서도 참여자의 77.5%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59.4%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에 동의하였다.¹⁰⁾ 따라서 기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대체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댓글 분석 결과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댓글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2021년 1월과 2022년 1월에 반대 의견이 우세하여 기존 여론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는 작성 비참여자보다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이슈에 감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댓글 작성자 집단이 대중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김슬이 · 이상우 · 정용국, 2020; 고문정, 2018; 엄기홍, 2020). 따라서 결과의 차이는 댓글을 작성하는 포털 뉴스 이용자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댓글 분석 결과는 어느 정도 편향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댓글 참여자라는 특정 집단의 의견을 파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찬반 댓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살펴본다. <표 4>와 <표 5>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기의 찬반 댓글 토픽과 주요 키워드를, <표 6>과 <표 7>는 시행 시기 찬반 댓글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우선 제정 시기의 찬성 댓글 토픽부터 살펴보면, 토픽1의 핵심 키워드는 ‘처리’, ‘입법’, ‘제정’, ‘빨리’ 등을 포함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댓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토픽2는 ‘미만’, ‘중소기업’, ‘보호’ 등이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의 포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토픽3은 ‘경제’, ‘죽이’, ‘계속’ 등이 메인 키워드로 나타났고, 댓글 내용은 주로 기업은 더 이상 근로자의 생명을 대가로 성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토픽4는 ‘산재’, ‘사업주’, ‘환경’, ‘관리’, ‘예방’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며, 댓글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와 산재예방은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관찰되었다. 토픽5의 키워드는 ‘하청’, ‘원청’, ‘문제’, ‘징벌’ 등으로, 하청업체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는 원청을 처벌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댓글 내용을 포함한다.

10) <표 3> 자료 참조.

〈표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자료별 찬성 비율

(단위 : %)

조사 자료	기준 시기	문항	찬성 비율
(1) 뉴스 기사 댓글	'20년 1월~ '22년 4월	댓글 내용에 따른 분류	44.8
(2) 리얼미터 인식조사	'20년 11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58.2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27.5
		'잘 모르겠다.'	14.4
(3) 뉴스토마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CSR연구소	'21년 8월	'더 강력한 방향으로 개정 필요하다'	39.3
		'예정된 시기에 시행 후 처벌 대상과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30.3
		'시행을 유예하거나 처벌수위의 완화가 필요하다.'	17.8
		'잘 모르겠다.'	12.6
(4)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22년 1월	'산재예방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	59.4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8.7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	17.3
		'잘 모르겠다.'	4.6

자료 : (1) 댓글 자료는 저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함.

(2) 연합뉴스(2020. 11.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공감 58.2% vs 비공감 27.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026300001>).

(3) 뉴스토마토(2021. 8. 2.), "(대한민국 대기업 신뢰지수) 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여론, '완화'보다 2배 높아",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3169>).

(4) 내일신문(2022.01.26.). "[산업재해 국민인식] 국민 10명 중 9명 '산재 심각하다'",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12454).

〈표 4〉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기 찬성 댓글의 토픽 모델링

토픽	토픽 주제	토픽 키워드	비중(%)
1	법안 통과 촉구	처리, 입법, 제정, 반대, 재벌, 제대로, 눈치, 발리, 만드, 필요, 국회, 반드시, 이제, 야당, 사회, 개혁, 정치, 지지, 제발, 국회의원	24.3
2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	미만, 사업, 의원, 지금, 중소기업, 진짜, 정의당, 지기, 중요, 사업장, 선진국, 보호, 개정, 반대, 응원, 정의, 생명, 적용, 정말, 보완	16.7
3	근로자 생명 보호	기사, 경제, 소리, 그냥, 자식, 죽이, 얼마나, 정부, 정신, 그렇게, 계속, 걱정, 기자, 가족, 인간, 노동, 경영, 문제, 사장, 망하	19.6
4	안전관리는 사업주의 의지	현장, 사망, 산재, 먼저, 사업주, 산업, 생명, 벌금, 회사, 건설, 이상, 환경, 관리, 작업, 예방, 투자, 강화, 개선, 경영자, 국가	21.4
5	원청의 처벌 강화	하청, 근로자, 원청, 업체, 관리, 사업, 문제, 사업장, 위험, 생명, 회사, 배상, 발생, 징벌, 책임지, 직원, 손해, 이하, 이제, 감독	18.0

주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기는 2020년 1월~2021년 1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 저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함.

반면 제정 시기의 반대 댓글에서는 기업 경영 악화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토픽1의 주요 키워드는 ‘해외’, ‘망하’, ‘고용’, ‘규제’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운영을 규제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주된 내용이다. 토픽2는 ‘대표’, ‘구속’, ‘장관’, ‘책임자’ 등이 핵심 단어로 등장하였다. 토픽2와 연관된 댓글의 내용은 주로 기업의 경영주가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는다면 공무원이나 국민이 사망할 시 국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처벌을 받아야 합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토픽3에는 ‘사업자’, ‘폐기’, ‘범죄자’ 등이 키워드로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사업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된다는 주장이다. 토픽4는 ‘민식이’, ‘악법’, ‘입법’ 등이 키워드로 포함되며, 관련된 주요 댓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민식이 법’과 비교하며 처벌법의 제정은 감정에 호소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통과된 법안이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법안의 통과에 불만을 표현하는 댓글이 주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토픽5의 키워드는 ‘발생’, ‘과실’, ‘수칙’, ‘작업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댓글은 주로 안전사고의 원인은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 안전 불감증 등과 같이 근로자 과실인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의 처벌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표 5〉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기 반대 댓글의 토픽 모델링

토픽	토픽 주제	토픽 키워드	비중(%)
1	해외로의 기업 이전	노조, 해외, 망하, 그냥, 대한민국, 국가, 이제, 고용, 공장, 한국, 세금, 규제, 외국, 결국, 중소기업, 투자, 전부, 운영, 자영업, 기업주	23.6
2	처벌의 합리성	대표, 감방, 구속, 징역, 장관, 감옥, 책임자, 적용, 책임자, 업체, 직원, 코로나, 하청, 이상, 국가, 문재인, 미안, 발생, 국회의원, 중대재해법	20.6
3	사업자를 범죄자 취급	경영자, 사업자, 없애, 감옥, 폐기, 일어나, 산재, 파멸, 범죄자, 밥상, 평생, 하늘, 교통사고, 주적, 자르, 사할, 자동차, 밤낮, 보험, 재앙	6.1
4	감성적·졸속 법안	법안, 만드, 민주당, 통과, 민식이, 악법, 경제, 입법, 정책, 정권, 정치, 너무, 진짜, 정말, 기업인, 그냥, 중대재해법, 모르, 문제, 죽이	27.8
5	근로자 부주의	발생, 관리, 산재, 산업, 잘못, 문제, 위험, 지키, 무조건, 과실, 작업, 경우, 본인, 건설, 예방, 교육, 수칙, 강화, 작업자, 아무리	21.8

주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기는 2020년 1월~2021년 1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 저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의 찬성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과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표 6 참조). 각 토픽별로 살펴보면 토픽1은 ‘얼마나’, ‘생명’, ‘안전’, ‘환경’ 등의 키워드를 포괄하며, 댓글은 주로 근로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토픽2에서는 ‘기자’, ‘기사’, ‘비용’, ‘기레기’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였고, 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및 완화를

주장하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을 담은 내용들이다. 토픽3은 ‘구속’, ‘사장’, ‘대표’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며, 기업주의 처벌이 안전보건 환경 조성에 필수임을 주장하는 내용들과, 2022년 1월 시행 이후에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건들의 기업주들을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토픽4는 ‘하청’, ‘원청’, ‘문제’, ‘안전관리자’ 등을 핵심 키워드로 포함하며, 원청을 처벌해야 안전보건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과 안전관리자의 권한 상승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토픽5는 ‘걱정’, ‘회사’, ‘사망’, ‘기사’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며, 주된 내용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향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 기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담고 있다.

〈표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 찬성 댓글의 토픽 모델링

토픽	토픽 주제	토픽 키워드	비중(%)
1	안전한 근로 환경	얼마나, 이제, 국민, 지금, 먼저, 제대로, 생명, 그동안, 그냥, 나라, 회사, 적용, 안전, 노동, 위험, 투자, 환경, 작업, 시행, 죽음	25.9
2	편파적인 언론에 대한 비판	기자, 기사, 산재, 지기, 비용, 사망, 문제, 경제, 발생, 생명, 기르, 중요, 계속, 기계기, 예방, 산업, 경영, 소리, 반대, 인간	18.5
3	기업주에 대한 처벌	구속, 사장, 대표, 관리, 사업주, 벌금, 이상, 회장, 징역, 조치, 신경, 책임자, 당연히, 발생, 정도, 오너, 세상, 감옥, 적용, 제대로	19.2
4	원청에 대한 처벌	하청, 나라, 업체, 원청, 강화, 문제, 관리, 필요, 공사, 선진국, 잘못, 건설, 국민, 개선, 제대로, 안전관리자, 국가, 제도, 손해	17.9
5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	걱정, 회사, 사망, 건설, 시행, 산업, 기사, 조선, 사업, 재벌, 제목, 지금, 가족, 문제, 한국, 개정, 소리, 사업주, 쓰레기, 많이	18.5

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는 2021년 2월-2022년 4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 저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에서 반대 댓글은 주로 일자리, 경제적 손실, 처벌의 합리성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표 7 참조). 각 토픽을 보면 토픽1의 키워드는 ‘일자리’, ‘작업자’, ‘발생’, ‘안전사고’ 등이며, 댓글은 안전사고는 기업주 의지와 상관없이 근로자 부주의나 방심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처벌은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내용, 대기업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이유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토픽2는 ‘건설’, ‘비용’, ‘아파트’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였고, 댓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사고 방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건설사의 비용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토픽3은 ‘감방’, ‘안전관리자’, ‘정권’, ‘무능’ 등을 포함하며,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임을 우려하는 내용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토픽4의 주요 단어는 ‘국가’, ‘경제’, ‘재앙’ 등이며, 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댓글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토픽5는 ‘사망’, ‘적용’, ‘문재인’, ‘장관’ 등의 키워드로, 앞서 제정 시기에서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통령에게까지 적용해야 합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표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 반대 댓글의 토픽 모델링

토픽	토픽 주제	토픽 키워드	비중(%)
1	일자리의 소멸	일자리, 사업주, 무조건, 규제, 교육, 작업, 아무리, 발생, 작업자, 예방, 안전 사고, 지키, 문제, 잘못, 본인, 개인, 경우, 중소기업, 수칙, 필요	27.5
2	건설업의 어려움 및 아파트 가격 상승	건설, 공사, 업체, 문제, 바지, 위험, 해결, 하청, 제대로, 원인, 강화, 비용, 아파트, 발주, 서류, 건설사, 모르, 그냥, 원청, 근본	15.5
3	안전관리자의 어려움	악법, 감방, 민주당, 안전관리자, 이제, 노조, 한국, 대표, 정권, 진짜, 전부, 잘못, 무능, 만드, 외국, 해외, 폐지, 식이, 노동	18.4
4	경제에 대한 불안	국가, 경제, 정책, 정권, 죽이, 대한민국, 재앙, 좌파, 산업, 법안, 그냥, 모르, 정치, 만드, 식이, 사건, 현실, 같이, 공산당, 입법	18.9
5	처벌의 합리성	사망, 대표, 적용, 감옥, 책임지, 배달, 문재인, 책임자, 장관, 징역, 백신, 코로나, 국회의원, 사망자, 이상, 기사, 최고, 교통사고, 도로, 운전	19.7

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는 2021년 2월~2022년 4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 저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함.

IV. 맺음말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고는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반응을 뉴스 기사 댓글을 통해서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댓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의 반대 의견은 특히 처벌법이 제정되는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법 제정과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이해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이형민·유현재·천용석, 2020).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되는 것일 수도 있어 그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은 처벌법의 국민적 수용성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며 이를 위해 시민들을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찬반 댓글의 내용을 살펴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찬성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자 생명에

대한 존중,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 사업주 처벌의 안전보건 환경 제고 효용성, 경영계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 등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반대 댓글에서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소멸됨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및 이를 근거로 하는 비판, 최고책임자 처벌에 대한 합리성 제기, 근로자 부주의에 대한 문제, 경제적 손실, 건설 비용 증가에 따른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댓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대체로 개인적 경험이나 의견인 경우가 대부분¹¹⁾이었으며,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댓글에서 법 적용에 따른 현장 변화에 대한 내용은 찾기 힘들었다. 따라서 댓글만을 기반으로 법의 성과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들의 의견과 우려가 비록 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민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법률의 개정 과정이나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자 할 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의 분석은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댓글의 규모는 뉴스 건수와 비례하여 이슈가 언론에서 주목될 때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댓글 담론의 활성화에서 언론의 역할이 지배적이며 언론의 주목 없이는 특정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뉴스 기사 외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에서 발생하는 댓글 토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댓글로 살펴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찬성 비중은 기존 설문 여론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댓글은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지만, 설문조사에서는 대체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댓글 작성자의 인구 특성이나 사회·정치적 성향이 전체 시민 집단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댓글로 확인한 찬반 비중은 설문 여론조사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뉴스 기사 댓글을 수집하여 처벌법에 대한 수용성과 의견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그쳤다. 향후 산재사고 건수 등의 자료가 축적되면 산재건수와 댓글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정책 효과와 시민들의 체감 및 인식 변화 등의 관계를 다각적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LI**

11) 예를 들면, 최근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윤준현 외, 2021), 환경경영과 사회책임경영 성과가 높은 기업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 추가에 긍정적인 영향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해당 법이 반대 댓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나 기업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반면 찬성 댓글의 주장과 같이 사업주의 강한 처벌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율적인지에 대한 근거도 역시 부족하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2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고문정(2018), 「누가 온라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뉴스를 공유하는가?: 통계 학습 방법의 적용」,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1), pp.5~51.
- 김경희·송경재(2018), 「누가 2위 포털인 다음 뉴스를 이용하는가?: 포털 뉴스 이용자의 특성과 포털 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6), pp.141~164.
- 김동훈·이재희·장현진(2021), 『빅데이터에 기반한 육아정책 쟁점과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선호·오세욱(2018), 「포털 뉴스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인식 조사」, 『Media Issue』, 4(5),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소정·김우찬(2021), 「사회적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와 공시효과를 중심으로」, 『재무관리연구』, 38(3), pp.201~238.
- 김슬이·이상우·정용국(2020), 「포털 뉴스 이용자의 댓글 쓰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4), pp.169~195.
- 양혜승(2008), 「인터넷 뉴스 댓글의 견해와 품질이 독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2), pp.254~281.
- 엄기홍(2020), 「온라인 공간은 누구의 의견을 대표하는가?」, 『미래정치연구』, 10(1), pp.99~122.
- 엄기홍·김대식(2021), 「온라인 정치 여론 분석을 위한 댓글 분류기의 개발과 적용: KoBERT를 활용한 여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20(3), pp.167~191.
- 오주현(2018),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의 댓글·게시글 작성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KISDI STAT Report』, 18-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준현·김근주·김기선·전형배·박수경·강련승(202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구체화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은주·장윤재(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3(4), pp.50~71.
- 이지현·김광기·제갈정·유승현(2018), 「공공장소 음주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반응: 온라인 기사 댓글 내용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5(4), pp.53~63.
- 이형민·유현재·천용석(2020), 「뉴스/댓글 빅데이터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옥외광고 규제 및 법령 관련 사회적 담론 연구」, 『광고연구』, 127, pp.5~44.
- 정일권·김영석(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4), pp.302~327.
-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2021 언론수용자 조사: 통계표』, 한국언론진흥재단.